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08
------	------

제출년월일 : 2021. 6.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학교운영과)

1. 제출사유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반영 및 조례 위임사항 정비

- 영 제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제한규정 삭제(안 제5조)
-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 삭제(안 제22조)
- 영 제17조 및 제35조에 따라 사용(대부)료 감면 대상 및 비율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30%~100%까지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범위 확대 (안 제33조)

-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용(대부)료 조정 비율 확대: 연간 사용(대부)료가 전년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 (안 제35조)
- 영 제14조, 제32조에 따라 사용(대부)료 분납횟수 최대 연 6회로 확대 및 상위법령상 납부유예규정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36조)

나.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 정비(안 제31조, 제6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9조)

4. 개정안: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나. 입법예고

- 기간 : 2021. 5. 3. ~ 2021. 5. 24.
- 제출 의견 : 의견없음

다. 관계법령: 붙임

라. 기타사항

- 부패영향평가: 붙임참조(부패유발요인과 무관)
-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대상 제외 대상(「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2호)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기부채납 재산의 사용료 감면)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를 따른다.

이 경우 기산일은 기부채납일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제6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이용일수”를 “사용일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지되고”를 “중지되고”로 한다.

제31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

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을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으로, “사용료”를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감경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또는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제4호 또는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제35조의 제목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등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70”을 “100”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대부료 등의 납부 기한)”를 “(대부료등의 납부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을 “재개발사업구역안”으로, “도시자”를 “도지사”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대부료등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본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본청 심의회”라 한다)는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교육지원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교육지원청 심의회”라 한다)는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2. (생략) 3.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u> 4. ~ 7. (생략) ③ ~ ⑤ (생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 <u>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u>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u>	제16조(기부채납 재산의 사용료 감면) <u>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

허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 ① ~ ③ (생략)

④·⑤ 삭제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2. (생략)

3.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⑦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24시간 전까지 미리 그 사용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를 따른다. 이 경우 기산일은 기부채납일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⑦ (현행과 같음)

1. -----

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
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생략)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
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
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생략)

⑧ (생략)

제31조(토석채취료 등) 제29조제1항
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
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 대하
여는 사용료·대부료 외에 토석채
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의 매각대금
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
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
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며, 그 밖

사용일수-----

-----.

2. (현행과 같음)

3. -----

중지되고 -----

-----.

4.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토석채취료 등) -----

----- 감정평
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1항,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제13조
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제12항-----

-----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 이하 같
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
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감경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또는 제3
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제4호
또는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
는 경우 : 대부료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제35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
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제35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6조(대부료 등의 납부 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제35조(대부료등의 조정) -----

----- 100
-----.

제36조(대부료등의 납부 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삭 제>

③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

를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④·⑤ (생략)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삭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광역시장(또는 도시자)이 「도시

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

--행정안전부장관-----

-----연 6

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

<삭제>

<삭제>

<삭제>

④·⑤ (현행과 같음)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현행과 같음)

2. -----

재개발사업구역안-----

----- 도시자-----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 ⑤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와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익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규칙)		
평 가 담 당	(소속) 감사관실	(직급) 행정4급	(성명) 한성식
입 안 주 관 부 서	시교육청 학교운영과	통 보 (조 치) 일	2021. 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규정 삭제,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 삭제, 사용(대부)료 감면대상 확대, 사용(대부)료 조정 비율 확대, 사용(대부)료 분납횟수 최대 6회로 확대 및 상위 법령상 납부유예규정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등의 내용으로 부패유발요인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p>(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정비, 공유재산 관리 대장 정비 관련 보고 체계를 현실과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부패유발요인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1A대구교육009			
정책명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운영과		
	담당자명	박정민	전화번호	053-231-0726
담당부서	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중등교육과		
	담당자명	김미숙	전화번호	053-231-0395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1년 05월 10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1년 05월 10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05월 10일</p>				